

미 국

□ FY2013 : 2012.10 ~ 20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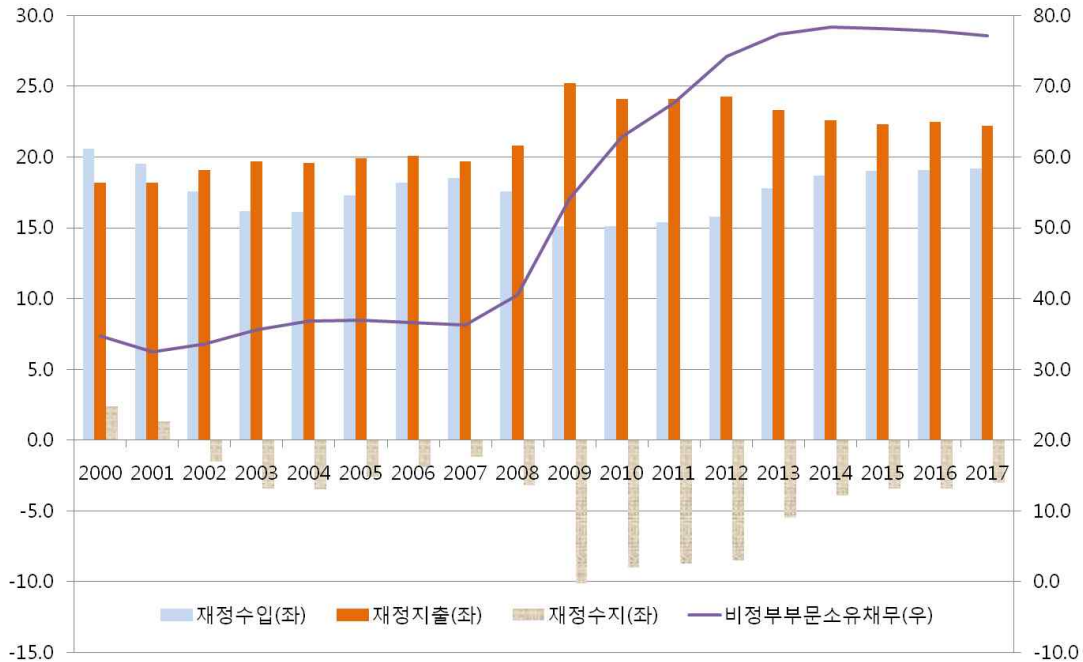
□ 출처 : Fiscal Year 2013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12.2월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2 to 2022, CBO, 2012.2월

□ 환율(2011년 평균) : 1USD = 1,108.11원

□ 경제규모 : 2010년 경상GDP 14조 4,471억 달러(우리나라의 10.2배)

[그림 1-1] FY2013 예산안 연방정부 재정수지 및 부채 전망

(단위: GDP 대비 %)



주: 1) 재정수입·재정지출·재정수지,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회계연도 기준

2)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debt held by the public):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을 의미하는 연방정부 공공채무(public debt)는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와 정부부문 소유 채무로 구성.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는 정부가 적자 보전을 위해 빌려오는 채무(누적개념)라는 의미에서 연방부채 판단시 유의미한 개념

3) 2000~2011년: 실적치

자료: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

<요 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2012년 실질GDP 성장률은 2.7%, 명목GDP 성장률은 4.5%로 전망
 - 2013년 실질GDP 성장률은 3.0%, 명목GDP 성장률은 4.7%로 전망
- (재정전망) 미국의 강력한 재정적자 감축 추진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4조 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일 계획

◇ 예산기조:

- ① 세제조정 및 신설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 ②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구축 지출확대
- ③ 일자리 창출

◇ 수입 및 주요 분야별 예산

- FY2013 재정수입은 전년(2조 4,690억달러) 대비 17.5% 증가한 2조 9,020억달러 (GDP의 17.8%) 전망
- 총 3조 8,030억 달러 규모의 FY2013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확고한 경제발전과 일자리 만들기를 최상의 목표로 두고 있음
- FY2013 예산안은 단기적인 경기부양과 재정적자 추진을 동시에 보여주는 투 트랙(two-track approach) 접근법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주요 재정정책

- 재정적자 감소 추진
 - 이라크 지역의 작전종료 및 군사철수 계획발표와 함께 국방비 감축
 - FY2013 국방 총예산은 FY2012(6,883억 달러)보다 2.23% 감소한 6,729억 달러 편성
- 국가 성장잠재력 증진
 - 도로, 교통 등의 사회간접자본확충 및 광대역 네트워크망 연결사업
- 일자리 창출의 재정적 지원
 - 국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및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0.7월	정부계약 관행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성과 발표	재정동향 3호
2010.7월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Improper Payments Elimination and Recovery Act 발표	재정동향 4호
2011.4월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의 FY2012 예산방침 발표	재정동향 6호
2011.4월	오바마 대통령, 향후 12년간 4조달러의 재정적자 감축계획 발표	
2011.5월	미 연방정부 부채; 법정한도인 14조 2,940억달러에 도달	재정동향 7호
2011.6월	백악관 직속 일자리/경쟁력위원회; 향후 2년내 100만개 일자리 만들기 방안 제시	
2011.8월	부채 상한선 조정 합의안 상/하원 통과; 사상초유의 채무 불이행 사태 모면	
2011.8월	S&P, 미국 연방정부 신용등급 'AA+'로 하향조정	
2011.9월	FRB 'Operation Twist' 실시 결정	재정동향 8호
2011.10월	FY2011 결산발표	
2011.11월	수퍼위원회 재정적자 감축협상 합의 실패	
2011.11월	Fitch, 미국 국가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하향조정	
2012.2월	오바마 대통령 FY2013 예산안 발표	
2012.2월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 발표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³⁾

- 경기낙관론 증가, 경기평가 상향 조정 등으로 고용상황이 개선될 전망
 - (경제성장률) 2012년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 이는 2011년 9월 전망보다 0.1%p 상향된 수치임
 - 2013년 3.0%, 2014년 3.6%로 전망
 - (실업률) 실업률은 2012년 8.9%에서 2013년 8.6%로 소폭 낮아질 전망이며, 2017년 이후 5%대 실업률 유지 예측
 - (금리) 경제지표 호조, 그리스 구제금융안 결정 기대감 등으로 안전자산 선 호심리가 약화되며 국채금리 상승

<표 1-1> FY2013 예산안 경제전망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실질 GDP ¹⁾	1.8	2.7	3.0	3.6	4.1	4.0	3.9	3.2	2.7	2.5	2.5	2.5
명목 GDP ¹⁾	4.0	4.5	4.7	5.3	6.0	5.9	5.7	5.0	4.5	4.4	4.3	4.3
CPI(CPI-U) ¹⁾	3.2	2.2	1.9	2.0	2.0	2.1	2.1	2.1	2.1	2.1	2.1	2.1
실업률 ²⁾	9.0	8.9	8.6	8.1	7.3	6.5	5.8	5.5	5.4	5.4	5.4	5.4
금리												
국채 91일물 ³⁾	0.1	0.1	0.2	1.4	2.7	3.8	4.1	4.1	4.1	4.1	4.1	4.1
국채 10년물	2.8	2.8	3.5	3.9	4.4	4.7	5.0	5.1	5.1	5.1	5.3	5.3

주: 1) 전년 대비 변화율

2) 연평균

3) 평균 수익률, 유통시장(은행 할인 기준)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3, OMB, 2012.2

3) 미국의 경제전망 부분에서 표시된 연도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를 나타내고, 그 이외의 부분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미국의 회계연도를 의미

나. 재정전망

- (재정수입) FY2013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17.5% 증가한 약 2조 9,020억 달러 (GDP의 17.8%) 전망
 - 최상위 소득계층 개인소득세율 인상, 자본소득세율 인상,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소득층에 최저세율로 30% 적용,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부부합산) 와 20만 달러 이상 개인에 대한 감세혜택 폐지 등으로 세수 증대 계획
 - FY2012 재정수입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3.3%→2.7%)에 따라 FY2011보다 7.2% 증가한 2조 4,690억 달러(GDP의 15.8%)로 전망
 - FY2014~FY2022 기간 동안 재정수입은 연평균 5.9%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재정지출) FY2013는 전년 대비 0.9% 증가한 3조8,030억 달러 전망
 - 일자리 증대를 위한 단기 조치(3,500억 달러),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 정부투자 확대(4,760억 달러), 학생·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청정에너지 개발, 제조업 R&D 지원 등의 재정지출 계획
 - FY2014~FY2022 기간 동안 재정지출은 연평균 5.1%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재정수지) FY2013 재정적자는 9,010억 달러로 GDP 대비 5.5%로 추정
 - FY2012 재정적자(1조 3,300억 달러)의 GDP대비는 8.5%로 추정하여 지난해 9월 적자규모 전망(9,560억 달러)에 비해 상향 조정함
 - 3,500억 달러 규모의 단기 일자리 부양책, 4,760억 달러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 단기부양책과 버핏세 도입 등 세수확대 및 정부지출 삭감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4조 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일 계획

- (국가채무) FY2012의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는 11조5,780억 달러로 GDP 대비 74.2%, FY2013에는 12조6,370억 달러로 GDP의 77.4%에 이를 전망
 - FY2014~FY2022 기간 동안 국가채무는 연평균 4.7%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

<표 1-2> FY2013 예산안 재정전망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총량(십억 달러)											
수입	2,469	2,902	3,215	3,450	3,680	3,919	4,153	4,379	4,604	4,857	5,115
지출	3,796	3,803	3,883	4,060	4,329	4,532	4,728	5,004	5,262	5,537	5,820
재정적자	1,327	901	668	610	649	612	575	626	658	681	704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11,578	12,637	13,445	14,198	14,980	15,713	16,404	17,137	17,897	18,678	19,486
예산총량(GDP 대비 %)											
수입	15.8	17.8	18.7	19.0	19.1	19.2	19.4	19.5	19.7	19.9	20.1
지출	24.3	23.3	22.6	22.3	22.5	22.2	22.0	22.3	22.5	22.7	22.8
재정적자	8.5	5.5	3.9	3.4	3.4	3.0	2.7	2.8	2.8	2.8	2.8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74.2	77.4	78.4	78.1	77.8	77.1	76.5	76.4	76.5	76.5	76.5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3, OMB, 2012.2

<참고> CBO 경제 및 재정전망(*12.2월)

- (경제전망) 2012년 실질GDP성장률은 2.0%, 실업률은 8.9%로 예상
- 2012년 세금감면*이 일몰되면 2013년 경제성장은 세금 인상과 소비 감소의 영향으로 둔화될 것이며, 2013년 실질GDP성장률은 1.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 고소득자에 대한 2001년, 2003년 세금감면 조치만료
 - 경기활성화로 2013년 실질GDP는 증가하지만, 2018년까지 잠재성장률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

경제전망

(단위: %)

	2011	2012	2013	2014-2017 평균	2018-2022 평균
실질 GDP ¹⁾	1.6	2.0	1.1	4.1	2.5
CPI-U ¹⁾	3.3 ⁴⁾	1.4	1.5	1.9	2.3
실업률 ²⁾	8.7 ⁴⁾	8.9	9.2	5.6 ⁵⁾	5.3 ⁶⁾

주: 1) 전년 4/4분기 대비 변화율

2) 4/4분기

3) 연평균

4) 2011년 확정치

5) 2017년 전망치

6) 2022년 전망치

자료: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2 to 2022, CBO, 2012.2월

□ (재정전망) FY2012 재정적자는 세수 확대와 정부 지출 감소의 영향으로 FY2011보다 약 2,000만 달러 감소한 1조 1,000억 달러(GDP 대비 7.0%*)로 전망

* FY2012 재정적자는 FY2011 GDP 대비 8.7%보다 1.7%p 하락

- 다만 4년 연속(FY2009~FY2012) 재정적자 1조원 대를 기록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
- 2001년, 2003년 세금감면 조치가 만료되면 재정적자 문제가 대부분 해결 될 것으로 전망
 - 세금감면 조치 후 FY2013 재정적자는 GDP 대비 3.7%, FY2017에는 GDP 대비 1.1% 감소할 것으로 예측

재정전망¹⁾

(단위: GDP 대비 %)

	2011 ²⁾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재정수입	15.4	16.3	18.8	20.0	20.2	20.5	20.5	20.5	20.6	20.7	20.9	21.0
재정지출	24.1	23.2	22.5	22.1	21.8	21.8	21.6	21.5	21.8	21.9	22.0	22.4
재정수지	-8.7	-7.0	-3.7	-2.1	-1.5	-1.6	-1.1	-0.9	-1.2	-1.2	-1.2	-1.4

주: 1) 현재의 정책 유지를 가정

2) 확정치

자료: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2 to 2022, CBO, 2012.2월

2. 예산기조

※ 예산기조의 세부내용은 주요 재정정책 참조

- 경기를 살리기 위한 단기 부양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대규모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장기적 해법 제시

 - ① 세제(세율조정 및 부유세 신설)를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 ②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구축 및 R&D지출확대
 - ③ 일자리 창출
- 총 3조 8,030억 달러 규모의 이번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확고한 경제발전과 일자리 만들기를 최상의 목표로 두고 있음
- 부유세 증설 (Buffet Rule) 및 세율조정을 통해 세입확대
 - 또한 세제 간소화 등을 통해 비효율적 비용을 줄여 재정적자 감소
 - 중소기업에 세제특혜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 추진
- 향후 미국 경제발전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재정건전화(세제조정 포함)를 가장 기본 단계로 설정
- FY2013 예산은 향후 10년동안 1조 달러의 재량지출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2011년 예산절감법(Budget Control Act)*을 기준으로 편성
 - * 예산절감법: 정부부채 한도확대와 연계하여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법안으로서, 재량 지출 (discretionary spending)에 한도(cap)를 설정함으로써 최대 지출규모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 FY2011 GDP의 8.7%를 차지하였던 재량지출을 FY2013에 7.7%로 감소계획
- FY2022까지 재량지출을 GDP대비 5.0%로 축소
-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성장잠재력 증진
- 고속도로, 다리, 철도, 활주로 등의 기반시설 구축
 - 도로, 교통 시스템의 현대화를 통한 경제발전 기여

- 일자리 관련 - 수동적 지원 형태인 실업지원(unemployment system)에서 적극적 지원 형태인 재취업지원(re-employment system) 방향으로의 전환 구상
 - 2008년도 금융위기 발발 후, 2009년도 우리나라의 추가경정예산에 상응하는 미국 경기부양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을 통해 일자리 마련 계획을 추진해 왔으며, 이후 다시 한 번 이번 예산을 통해 실업률 감소에 주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Alan Krueger)은 이번 예산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2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평가
 - 또한 이번 예산을 통해 2012년 대선기간 전까지 실업률을 8%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

- FY2013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17.5% 증가한 2조 9,020억 달러 (GDP의 17.8%) 전망
 - 세입 총액의 90%이상을 차지하는 개인 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및 기타급여세(payroll tax)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될 전망
 - 관세, 재산 및 증여세는 전년도 대비 각각 6.4%, 18% 증가 전망
- FY2013 주요 세제개편안⁴⁾
 - 대형금융기관(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에 부과금 부여
 - 대형은행들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위기 책임금(Financial Crisis Responsibility Fee)을 부과함으로써 향후 10년(FY2013-2022)동안 610억 달러 세입재원 창출
 - 석유(oil), 휘발유(gasoline), 탄광회사(coal company)등에 제공했던 12가지

4) 미 행정부는 FY2013 예산안 발표 9일후(22일) 법인세 인하(기본세율 35% -> 28%)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 동 내용은 본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계간 KIPF(통권 9호)』에 수록 예정

세금우대조치(tax breaks)를 제거

-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410억 달러의 세입재원 창출

○ 조세체계 단순화 및 비효율적 세금우대조치 삭제

○ 부유세 증설(Buffer Rule)의 내용이 담긴 소득 상위층에 대한 세금인상 및 조정

- 연간 개인소득이 100만 달러가 넘는 경우 최저세율로 30% 적용

- 연소득 25만 달러 초과 부부와 20만 달러 초과 개인의 기부행위 시 세금공제비율의 최고한도를 28%로 조정

- 2013년 최상위소득계층의 개인소득세율을 현행 36%에서 39.6%로 인상

• FY2013 기준, 230억 달러의 적자감소 예상

- 부유세율 조정(upper-income tax provisions)을 통해 향후 10년간 최상위층 으로부터 징수할 세금을 합할 경우 1조 4,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표 1-3> 분야별 세입전망

(단위: 10억달러)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개인소득세	1,091	1,165	1,359	1,476	1,617	1,763	1,912	2,052	2,184	2,319	2,459	2,605
법인세	181	237	348	430	445	455	473	480	485	494	507	520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 수입: 사회보장 급여세	566	572	677	742	781	833	881	936	987	1,034	1,093	1,150
의료보험(Medicare) 급여세	188	203	214	226	240	257	273	290	306	321	339	357
실업보험	56	57	58	59	75	79	75	73	65	64	66	67
기타 퇴직연금	8	9	10	11	12	12	13	13	14	14	16	17
소비세	72	79	88	99	104	106	112	120	136	142	150	159
유산세 및 증여세	7	11	13	23	25	27	29	32	34	37	39	42
관세	30	31	33	36	38	39	41	44	46	48	50	52
연방준비제도 이익금	83	81	80	61	46	36	36	38	40	42	43	45
기타 수입 (연방준비제도 이익금 제외)	20	24	21	52	68	71	74	77	83	89	95	101
총 재정수입	2,303	2,469	2,902	3,215	3,450	3,680	3,919	4,153	4,379	4,604	4,857	5,115
GDP 대비 %	15.2	15.6	17.6	18.5	18.7	18.8	19.0	19.1	19.3	19.5	19.7	19.9

자료: Fiscal Year 2013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12.2월 (Table S-5)

나. 세출

- FY2013 대통령예산안은 안정적 생활을 위한 중산층 지원과 더불어 글로벌 경제의 중심이 되기 위한 노력, 전문분야 최고의 교육 및 숙련 노동자를 위한 세출계획 등이 담겨 있음
 - 최첨단 교통 시스템, 통신 네트워크 개발
 - 범산업적 R&D 연구장려
 - 효율과 효과성이 조화를 이룬 건강보험 지출을 통해 고품질의 의료서비스 구축
 - 미래를 위한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FY2011에 이어 향후 10년간 10만명의 과학, 수학교사 양성
 - 노동자를 위한 고도의 교육과 숙련된 기술배양 지원
 - Clean Energy를 위한 기술연구 지원
 - 지역경제를 이끌 혁신 프로젝트 등의 사업지원 (2억 2,000만 달러 예정)

- 결론적으로, ①튼튼하고 안정적인 경제(strong economy)를 지향하면서 ②불필요한 재정소요 부문을 과감히 줄여(cutting waste, reducing the deficit) ③미래를 위한 개발에 투자(investing in our future)를 원칙으로 함

<표 1-4> 항목별 지출전망

(단위: 10억달러)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재량지출 프로그램: 안보	838	868	851	768	749	757	771	786	803	820	837	856
비안보	462	450	410	393	385	386	390	397	405	415	420	430
재량지출 프로그램 합계:	1,300	1,319	1,261	1,160	1,135	1,143	1,162	1,183	1,208	1,236	1,258	1,287
법정지출 프로그램: 사회보장	725	773	820	867	918	970	1,026	1,085	1,149	1,216	1,287	1,361
메디케어	480	478	523	551	569	619	633	654	716	767	822	908
메디케이드	275	255	283	338	370	399	423	450	479	510	542	578
부실자산 구제프로그램	-38	35	12	8	5	2	1	*	*	*
기타 법정지출 프로그램	631	711	654	644	665	705	712	716	750	775	821	826
법정지출 프로그램 합계	2,073	2,252	2,293	2,409	2,527	2,695	2,796	2,905	3,094	3,269	3,472	3,673
순이자 (Net Interest)	230	225	248	309	390	483	565	631	692	748	798	850
재해복구 및 구호비용	*	*	2	5	7	8	9	9	10	10	10	10
총재정지출	3,603	3,796	3,803	3,883	4,060	4,329	4,532	4,728	5,004	5,262	5,537	5,820

자료: Fiscal Year 2013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12.2월 (Table S-5)

<표 1-5> 기관별 재량지출 예산권한 내역

(단위: 10억달러)

	2012 승인규모	2013 예산요청	후속년도(Outyears)			
			2014	2015	2016	2017
기관별 재량지출 재원:						
안보 기관:						
Defense(DOD)	530.5	525.4	533.6	545.9	555.9	567.3
Energy -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11	11.5	10.8	11	11.2	11.4
Homeland Security(DHS)	39.7	39.5	39.8	40.5	41.2	41.9
Veterans Affairs	58.5	61	63.1	64.2	65.5	66.9
State and Other Int'l Programs	43.7	48	48.9	49.8	50.8	51.9
Intelligence Community Management Account	0.5	0.5	0.6	0.6	0.6	0.6
안보기관 예비비	1.8	-0.4	0.3	1
안보 기관 합계	684	686	698.4	711.6	725.3	741
비안보 기관:						
Agriculture	22	21.4	22.6	23.1	23.5	24
Commerce	7.7	8	8.3	8.6	8.9	9.4
Census Bureau	0.9	1	1.2	1.3	1.5	1.8
Education	67.4	69.8	70.3	71.2	72.2	73.3
Energy(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제외)	15.3	15.6	16.3	16.6	16.9	17.3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78.3	71.7	79.8	81.3	82.9	84.7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38.2	35.3	39.2	40	40.8	41.7
Interior	11.3	11.4	11.8	12.1	12.3	12.6
Justice	26.8	17.9	27.7	28.3	28.8	29.5
Labor	13.2	12	12	11.3	11.5	11.8
State and Other Int'l Programs	0.1	0.1	0.1	0.1	0.1	0.1
Transportation	13.7	13.8	14.1	14.4	14.7	15
Treasury	13.2	12.6	13.7	14.1	14.5	14.9
Corps of Engineers	5	4.7	4.8	4.9	5	5.1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8.5	8.3	8.5	8.7	8.9	9.1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1.0	-0.8	-1.2	-1.3	-1.3	-1.4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17.8	17.7	18	18.4	18.7	19.1
National Science Foundation	7	7.4	7.5	7.6	7.8	8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0.9	0.9	1	1	1	1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8.8	9	9.2	9.4	9.5	9.7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1	1.1	1.1	1.1	1.1	1.1
Other Agencies	18.2	18.9	19.3	19.6	20	20.4
비안보기관 예비비	-21.1	-20.3	-20.5	-20.8
비안보 재량지출 예산권한 합계	373.6	356.8	363.3	370.1	377.3	385.5

자료: Fiscal Year 2013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12.2월 (Table S-12)

4. 주요재정정책

가. 재정건전화

- 재정적자 감소 추진을 통해 향후 10년 안에 GDP 대비 재정적자를 2.8%로 축소
 - 재정적자가 FY2012까지 증가하다가 FY2013부터 9,000억달러대로 진입 전망
 - FY2018부터는 재정적자 규모 감축 목표를 GDP의 3%이하로 설정
 - 불필요한 행정비용 삭제 또는 조정 및 중복되는 예산 프로그램 합병
 - 국가 행정비용의 20%를 감축하는 내용의 2011년 11월 대통령 행정명령 (executive order)을 포함하여 FY2013에는 약 80억 달러가 절약될 것으로 전망

<표 1-6> FY2013 예산안 전망 및 재정적자 감축추이

(단위: 10억달러)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총량(10억달러)												
수입	2,303	2,469	2,902	3,215	3,450	3,680	3,919	4,153	4,379	4,604	4,857	5,115
지출	3,603	3,796	3,803	3,883	4,060	4,329	4,532	4,728	5,004	5,262	5,537	5,820
재정적자	1,300	1,327	901	668	610	649	612	575	626	658	681	704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10,128	11,578	12,637	13,445	14,198	14,980	15,713	16,404	17,137	17,897	18,678	19,486
예산총량(GDP 대비 %)												
수입	15.4	15.8	17.8	18.7	19.0	19.1	19.2	19.4	19.5	19.7	19.9	20.1
지출	24.1	24.3	23.3	22.6	22.3	22.5	22.2	22.0	22.3	22.5	22.7	22.8
재정적자	8.70	8.50	5.50	3.90	3.40	3.40	3.00	2.70	2.80	2.80	2.80	2.80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67.7	74.2	77.4	78.4	78.1	77.8	77.1	76.5	76.4	76.5	76.5	76.5

자료: Fiscal Year 2013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12.2월 (Table S-1)

□ 국방예산 감축

- FY2013 국방 총예산은 전년도(6,883억 달러)보다 154억 달러 감소한 6,729억 달러 전망
- 최우선 순위의 프로그램(예, 무인위성정찰기, upgrade된 전술차량을 개발) 선택과 집중있는 투자를 위해 불필요한 합동타격전투기(Joint Strike Fighter) 또는 공수작전 항공기(C-27 airlift aircraft)등의 규모 감소 계획
 - 새 국방시스템 전략예산을 통해, 향후 10년동안 4,870억 달러의 재정절감 효과 기대
- 이라크 지역 작전종료 및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규모를 축소조정
 - 이에 따라, 해외긴급작전(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s)에 소요되는 비용이 FY2012(1,265억달러)에 비해 23% 감소한 967억 달러로서 300억 달러 절약

□ 세제간소화

- 오바마 대통령의 'Fair Shot'과 'Fair Share'를 기초로 한, 부유세 신설과 세율구간 조정을 통해 재정재원을 확충하고, 중산층 및 그 이하 소득층으로의 자원배분이 적절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
- 자세한 주요세제 개편안 내용은 예산안 내용의 세입부분 참조

나. 성장잠재력 지원

□ 일자리 창출

-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 주거 및 상업지역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발전 지원
 - 전년도 대비 3.2% 늘어난 448억 달러 투자
- 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노면교통 재정리
 - 이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기여
- 2013년중에 완료될 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Program)의 연장을 위한 11억 달러 예산배정

□ 세계 흐름에 맞는 각 분야 전문가 양성

- 오바마 대통령의 “Investing Our Future” 기조 하에 숙련된 노동자 양성을 위한 주정부와 전문대학(community college)의 파트너십 장려 및 지원
 - 총 125억 달러 소요예정

□ 교육투자 확대

- 최소 35,000개의 학교 시설 현대화 300억 달러 투자
-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교사 채용 및 유지비용으로 300억 달러 지원
- 1인당 최대 10,000달러 최장 4년까지 ‘고등교육비용공제(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를 지원
 - 위 제도로, 9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미국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학비지원금인 Pell Grant 장학금제도 유지
 - 최대수혜 금액 5,635달러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지속

□ 인프라 구축

- 6년 동안 총 4,760억 달러에 달하는 노면교통재정리 예산을 도시간 수송레일로 확대적용
 - 도로교통 안전 및 경제발전의 현대화 전략의 일환으로 예산배정함
 - 도로, 철도, 활주로 등에 즉각 투자될 500억달러를 통해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
 - 본 예산의 주된 재원은 이라크 지역 군사주둔의 종료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운영비 감축을 통해 얻는 수입으로 충당
- 55가지 종류의 중복되는 고속도로 프로그램(highway programs)을 5가지로 통폐합
 - 관련 재원은 전국사회간접재투자은행(National Infrastructure Bank)에서 기금조성
 -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해당사업의 관리 및 운영상황을 연방정부에 보고해야 함
- 무선 광대역 통신망 구축
 - 본 사업을 위해 100억 달러의 기금조성 계획

□ 연구개발(R&D) 및 제조업 지원

- 총 1,408억 달러를 들여 전분야에 걸친 R&D 장려
 - 국방분야를 제외한 R&D 분야는 전년도보다 5% 증가한 예산배정
 - 특별히 다음 세 주요연구기관에는 예산을 증액하여 배정
 - 1) 국립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_연방정부의 과학진흥 기구)
 - 2) Department of Energy's Office of Science (가칭: 에너지과학부)
 - 3) 미국표준기술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Laboratories)
 - 미국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질병관리 개선 연구비용으로 FY2012와 동일한 307억 달러 예산배정
- 제조업계의 장기적 경쟁력을 위한 연구지원으로 총 22억 달러 배정
 - FY2012 대비 19% 증가한 금액으로서, 정부와 사기업(private companies)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smart system 연구/개발 촉진